

#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과 우리해군 대응책 연구: 해양 기반 삼전(三戰) 전개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김남수\*

- I. 서론
- II.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 개념 및 사용배경
- III.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 사례 분석: 삼전을 중심으로
- IV. 한반도 근해 회색지대 전략 양상 전망 및 우리해군 대응책
- V. 결론

## ◀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현재까지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에 관한 국내 연구들이 기존 미국 주도의 회색지대 연구의 분석 결과를 답습하고 있으며, 대응책에 관해서도 원론적 입장과 방향만이 제시된 '선언적·개념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필자는 위 문제점 극복을 위해 중국은 자국 고유의 전략문화를 구성하는 '삼전'을 기반으로 해양 회색지대 전략을 전개한다는 인식 하에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서해와 이어도 일대에서 전개 중인 해양 회색지대 전략을 삼전의 영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추후 서해와 이어도 일대를 차지하기 위해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은 보다 공세성을 띠 것으로 예측되며, 우리해군 대응전략 개념으로 『중국 해양 회색지대 전략의 기반인 '삼전'의 전개 효과를 '무력화'시켜 중국이 유도하는 점진적인 현상 변화를 멈추게 하고, 규범·규칙에 기반한 해양질서로 '환원'을 지속적으로 추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응전략의 개념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화·체계화'된 대응책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주제어** : 회색지대 전략, 삼전, 전략문화, 해양강국, 기정사실화, 살라미 전술

## 1. 서론

중국은 1949년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한 이후 오랜기간 대륙중심 국가의 성격을 가졌으며, 해양을 활용한 국가발전 전략 수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 지도부는 해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군사·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sup>1)</sup> 이는 해양으로부터 국가발전에 필요한 군사·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중국이 남중국해로 해양진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중국은 2012년 국가대전략 차원에서 해양강국 건설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면서부터 남중국해를 벗어나 동중국해, 그리고 서해로도 본격적인 해양진출을 시작하였다. 중국은 해양진출 간 역내 국가들과 영유권 다툼 및 관할권 갈등을 감수하면서 자신만의 해양권익, ‘주권 및 권리’를 주장하는 해양영역을 서서히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국가 대전략 차원의 해양진출을 통한 해양영역 확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군전략을 2019년 근해방어와 원해방위로 변경하였다. 이는 중국이 1985년 해군전략으로 근해방어를 채택한 이후 30년이 더 지난 후의 변화였다. 중국의 이러한 해양에서 현상변경적 활동에 대해 역내 국가를 비롯한 중국과 패권경쟁 중인 미국에서는 중국이 ‘해양에서 회색지대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위협의식을 갖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유관부처 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에서 중국이 서해와 이어도 일대 해역에서 진행 중인 ‘회색지대 전략’에 대해 위협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전략 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공청회 및 연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공청회 및 연구 활동의 결과들은 이미 미국 국방부·국무부 및 다양한 민간 연구기관 주도로 이루어진 기존의 중국 회색지대 전략 연구의 분석 결과를 답습하고 있으며, 새로운 분석의 시각과 관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응책에 관해서도 해군과 해경이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위협의식을 갖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과 방향만이 제시되고 있을 뿐이며, 단호한 대응의 ‘구체화·체계화’된 이행방안은 담고있지 못해 ‘선언적·개념적’ 수준의 대응책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기존 국내연구가 갖는 한계 및 문제점 인식 하에 주변국과 해양분쟁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해군이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 전개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구체화·체계화’된 이행방안이 담긴 대응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1) You Ji. *The Armed Force of China*(New York: I.B. Tauri, 1999), pp.161-163.

필자는 중국은 자국 고유의 전략문화를 구성하는 ‘삼전(三戰)’을 기반으로 해양 회색지대전략을 전개한다는 인식 하에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근해에서 진행한 해양 회색지대 전략을 삼전의 영역(법률전·심리전·여론전)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필자는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해군의 전략개념으로 『중국 해양 회색지대 전략의 기반인 ‘삼전’의 전개 효과를 ‘무력화’ 시켜 중국이 유도하는 점진적인 현상 변화를 멈추게 하고, 규범·규칙에 기반한 해양 질서로 ‘환원’을 지속적으로 추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우리해군의 대응 전략 개념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화·체계화’된 대응책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자가 진행한 연구는 다섯 장으로 구성된다. II장은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 개념 및 사용배경을 분석한다. III장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근해에서 진행한 해양 회색지대 전략을 삼전의 영역(법률전·심리전·여론전)별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VI장에서는 한반도 근해 회색지대 전략 양상 전망 및 우리해군 대응책을 제시한다. 마지막 V장 결론에서는 앞서 분석 및 도출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며, 본 연구결과가 한국해군의 전략 발전방향 수립에 주는 함의를 고찰한다.

## II.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 개념 및 사용배경

### 1.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 회색지대 전략 + 해양기반 삼전(三戰)의 전개

오랜 전부터 전쟁과 평화의 경계지역(혹은 회색지대)에서 모호성을 활용해 자국의 정치·군사적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관심은 지속 존재하였지만, 이를 구체적인 전략의 범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 국방부가 2010년 ‘국방검토보고서(QDR)’를 발간하면서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이후 미국에서는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미국 국무성은 2017년에 회색지대 전략을 흔히 인정된 정규 군사력의 직접적인 사용은 아니나 비대칭적 또는 애매모호한 방식과 수단을 활용하여 상대국가의 대응을 무력화 내지 좌절시키면서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의 사용’으로 정의하였다.<sup>2)</sup>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를 시작으로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

2) International Security Advisory Board, U.S Department of State, *Report on Gray Zone Conflict* (January 3, 2017), p. 1.

으며, 그 결과 다수의 학자 및 안보 연구기관에서는 회색지대 전략의 특징으로 수단의 비대칭성, 상대방 대응의 무력화를 위한 애매모호성, 실행의 점진주의, 전략적 목표의 단계적 접근, 일부 활동의 불투명한 귀속성, 법적·정치적 정당성 추구, 군사적 충돌의 임계값 미만 유지성, 강압수단의 원천으로 확전 위협의 활용성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위 주요 특징들을 토대로 회색지대 전략은 단계적이며 점진적 변화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야금야금 성취하는 이른바 ‘살리미 전술’의 속성과 함께 상대의 즉각적 반응을 유도하지 않은 채 행동의 반복을 통해 점점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기정사실화’의 속성을 갖는다고 설명한다.<sup>3)</sup>

연구자는 중국이 해양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 구사하는 해양 회색지대 전략의 ‘실체’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삼전(三戰)을 기반으로 위와 같은 특징과 속성을 갖는 회색지대 전략을 연계시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회색지대 전략’이라는 용어는 미국이 사용하면서 보편·일반화되었으나, 중국 내부적으로 ‘회색지대 전략’과 유사하게 상대국과 무력 충돌을 회피하는 수준을 유지하며, 평시와 전시를 구분하지 않고 항시 자국의 전략적 우위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자국의 전략으로 ‘삼전’이라는 고유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sup>4)</sup>

중국의 삼전은 2003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배포한 정치공작조례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하지만 삼전이라는 개념은 2003년에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이미 2,500년 전 손자가 작성한『손자병법』은 적의 인식과 심리를 조작하고, 기만을 통해 싸우지 않고 적의 저항을 무너뜨리는 개념들을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과거 국공 내전시기 공산당이 국민당 대비 열세한 군사력을 극복하고 대륙을 장악하기 위해 전개한 전략을 마오쩌둥이 삼전의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즉 삼전은 중국 고유의 전략문화를 구성하는 고전적 전략개념이라 할 수 있다.<sup>5)</sup>

따라서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은 중국 고유의 전략문화를 구성하는 ‘삼전’ 개념을 기반으로 ‘보편·일반화’된 회색지대 전략이 결합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통상적 일컫는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의 실체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효

3) Michael Green, et al, *Countering Coercion in Maritime Asia: The Theory and Pratic of Gray Zone Deterrence*(Washington, D.C: CSIS, 2017), pp. 29-3; Lyle J. Morris, et al, *Gaining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ray Zone: Response Operations for Coercive Aggression Below the Threshold of Major War*(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19), pp. 8-12; 이서항 등 9명,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경기: 도서출판 인간사랑, 2020), pp. 35-38.

4) 표나리,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과 3전의 전개: 한국에 대한 함의,” 『정책연구시리즈』, 2022-10, 국립외교원 안보연구소, 2022, pp. 14-15.

5) Georgetown Security Studies Review([georgetownsecuritystudiesreview.org](http://georgetownsecuritystudiesreview.org)) “China’s “Three Warfares” In Theory and Practice in the South China Sea(검색일: 2024. 2.10.); 월간군사저널 ([no2.nayana.kr](http://no2.nayana.kr)), “중국 삼전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검색일: 2024. 2.10.).

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삼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결된다.

중국의 삼전은 크게 법률전·심리전·여론전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주요개념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률전이란 국내·외 다양한 법적 제도와 장치, 규범들을 정치·외교적 무기로 이용하고, 이를 통해 평시와 전시에 걸쳐서 의도하는 전략적 목적 달성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자국 법과 국제법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 및 재해석을 시도하며, 만일 자신의 주장이 국제적 통용 관습 또는 현행 법 제도와 배치된다 하더라도 중국에는 국제관습으로 자리 잡도록 일방적 주장을 반복, 지속적 시도한다.<sup>6)</sup>

심리전은 대결 발생 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강압적 심리전을 통해 대결에서 비롯될 인적·물적 손실과 책임의 귀속에 대한 공포와 부담을 자극하여 상대국의 대결 회피 유도를 추구한다. 이러한 강압적 심리전의 뚜렷한 특징은 상대국가의 군이나 리더십, 민간인들의 사기와 자기 확신을 저하시켜 군사활동의 수행능력 약화를 추구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중국의 심리전은 정치·외교적 차원의 호전적·적대적 수사 뿐만 아니라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강력한 신무기의 시험을 포함하는 무력시위 등 물리적 역량을 과시한다는 특징이 있다.<sup>7)</sup> 중국은 이를 통해 상대국의 대결 회피 행태를 반복·누적시켜서 자신은 더욱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일방적인 주장의 강화, 활동의 공세성 증대, 활동영역 확장을 추구한다.<sup>8)</sup>

여론전은 상대국의 여론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정보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정치적 혹은 군사적 조치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고, 반대로 상대국 국민들에게는 자국의 행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여론이 조성되는 것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대중 매체들을 통하여 상당한 규모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자국에 유리하게 선별, 가공된 정보를 전파 및 유포한다. 이러한 여론전의 수행은 상대국과 정치·군사적 대결, 분쟁 발생 및 전개, 종결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옳다는 인식을 대·내외적으로 강화시키고, 반대로 상대방에게는 기존의 행동, 주장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키면서 대결을 지속하려는 의지에 타격을 가하는 효과를 발휘한다.<sup>9)</sup>

6) 김재엽, “전쟁 이외의 전략도전으로서 중국의 삼전: 특징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의 시사점,” 『신아세아』, 29권 1호, 2022, pp. 105-106.

7) 서론에서 밝힌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III장 중국 해양 회색지대 사례분석 시 심리전 영역에서는 정치·외교적 측면의 심리전을 일부 다루지만 물리력이 동원되는 군사적 측면, 즉 강압적 심리전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8) 표나리,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과 3전의 전개: 한국에 대한 함의,” p. 13.

9) Sangkuk Lee, “China’s ‘Three Warfares’: Origins, Applications, and Organization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7, No. 2(2014), p. 203; 김재엽, “전쟁 이외의 전략도전으로서 중국의 삼전: 특징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의 시사점,” pp. 104-105.

지금까지 알아본 보편·일반화된 회색지대 전략의 개념과 중국 고유의 삼전 개념을 연계해보면,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이란 해양 기반 삼전(법률전·심리전·여론전)의 전개를 통해 평시와 전시를 구분치 않고 군사적 충돌의 임계점을 넘지 않는 가운데 군사적·비군사적 수단들을 이용 상대의 대응방식 결정에 혼란을 유발하는 모호한 도발을 할 뿐만 아니라 고강도의 우월한 물리적 역량 과시를 통해 상대국의 대결 회피 행태를 반복·누적시키며, 국제법규와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도하여 점진적으로 중국이 요망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2.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 구사 배경

중국은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해양강국 건설을 이룩하기 위해 해양팽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對) 중국 포위에 맞서 해양이 주는 경제적·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해서 중국적으로 미·중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때 중국은 해양팽창을 추진하면서 과거 1974년 남베트남 해군의 프리깃함을 격침시키고 파라셀군도(중국명 서사군도)의 우디섬(중국명 용싱다오)을 무력으로 점령한 것과 같은 직접적인 군사충돌을 감행하는 대신에 시간이 걸릴지라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상대의 해양영역을 서서히 장악해가는 해양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그 배경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은 해양팽창 간 발생하는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은 국제문제가 아닌 중국과 당사국 간의 양자문제로 국한시켜 미국이 역내 개입할 빌미와 명분을 주지 않는 여건조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은 미국의 대(對)중국 해양봉쇄 전략에 맞서 해양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하므로 시간이 걸릴지라도 분쟁 상대국과 군사적 충돌의 문턱을 넘지 않으면서 해양영역 확장이라는 목표 달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자신이 일방적 주장하는 해양영역에서의 주권과 권익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역내 국가들과 해양에서의 공동개발에 따른 경제적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이익공동체론'을 외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sup>10)</sup>

셋째, 중국은 미국과 패권경쟁 간 국제사회에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를 제시하면서 글로벌 리더십 향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해양영역 확장에 대해 중립국과 제3국이 비판적 인식과 위협의식을 갖지 않고 점차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10) 이동률,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57(2), 한국국제정치학회, 2017, pp. 381-382.

### Ⅲ.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 사례 분석: 삼전을 중심으로

Ⅲ장에서는 우선 중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근해에서 해양영역 확장을 위해 구사하는 해양 회색지대 전략을 삼전(법률전·심리전·여론전)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후 각 해역별 해양 회색지대 전략 전개 양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차후 중국이 한반도 근해에서 전개할 해양 회색지대 전략의 양상을 전망한다.

#### 1. 남중국해 회색지대 전략 사례 분석

법률전으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오랜 기간 진행 중인 해양영역 확장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자신이 일방적 주장하는 확장된 해양영역에서의 자국 민간 선박, 관공선, 군함의 자유로운 활동의 법적 정당성과 명분을 국제사회에 주장 및 인정받기 위해서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공식 발표 및 진행하고 있다.

첫째, 1992년 남중국해 대다수 해역을 자신의 영해로 주장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공표하였다. 이는 1994년에 항행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을 담은 유엔해양법협약이 공식 발효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며, 이후 2009년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중국은 남중국해의 섬들과 인접 수역에는 명백한 주권을 갖고 있으며, 관련 해역과 해저 및 하층토에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남중국해의 80% 이상을 포함하는 9단선(nine dash line)이 그려진 남중국해 지도를 첨부하였다.<sup>11)</sup>

둘째, 필리핀 제소로 이루어진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판결 결과를 불인정하고 있다. PCA는 중국이 영유권 근거로 주장한 9단선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스프래틀리 제도의 어떤 지형물도 섬이 아니므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PCA는 남중국해에 대한 법적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판결이 무효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에 관한 성명’<sup>12)</sup>을 발표하여 역사적 권원 및 국내법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거듭 강조하였다.

셋째,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군도 내 압초 및 산호초에 인공섬과 R/D 기지, 군용기 활주로 등의 군사시설 건설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상 이러한 인공섬과 군사시설은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과 같은 관할권을 가질 수 없음이 명백함

11) 이재현, “남중국해에서 공세적 중국의 실태: 세밀한 계획 부재와 잘못된 상황 판단,” 『Issue Brief』, 2016-12호, 아산정책연구원, 2016, p. 11.

12) 세부 성명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 - 주한중국대사관(kr.china-embassy.gov.cn),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에 관한 성명”(검색일: 2024. 2.11.).

에도 불구하고<sup>13)</sup>, 중국은 인공 시설을 바탕으로 장래에 남중국해에서 보다 확대된 관할권을 일방적 주장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치·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의도를 보이고 있다.<sup>14)</sup>

넷째. 남중국해 군도 및 암초를 대상으로 행정구역 편입 및 정례적인 어업금지령 발효를 통해 법에 기반한 관할권(강제적 물리력·행정적 조치)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6월 파라셀군도, 스프래틀리군도 인근 해역을 행정관할하는 기구로서 삼사시(三沙市)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외교부 성명을 통해 공표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은 파라셀군도와 스프래틀리군도 내 80여개의 섬과 암초에 중국식 지명을 붙였다.<sup>15)</sup> 또한 중국은 매년 5~8월 경 까지 파라셀군도와 스카버러 암초 등을 포함한 해역에서 어업금지령을 선포해 해당 해역에서의 조업 활동을 하는 타국가의 어선을 상대로 물대포, 어획물 탈취 등 고강도 강제적 물리력 행사로 자신의 실효지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sup>16)</sup> 2024년 3월에는 필리핀 인원 34명이 스프래틀리군도 내 샌디케이(중국명 테센자오) 암초에 상륙하자 중국 해경의 법 집행요원이 암초에 올라 필리핀 인원들의 위법행위를 조사했다는 발표를 하였다.<sup>17)</sup>

심리전으로 중국은 장시간에 걸친 점진적 현상변경을 통해 행정구역 설치와 어업 통제 등의 법적인 관할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보다 공세적으로 물리적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통해 중국은 당사국의 대결 회피 행태를 반복·누적시켜서 자국의 실질적인 남중국해에 대한 물리적 통제를 상대국에 각인 및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첫째. 민·관·군을 동원한 이른바 ‘별떼’ 전술과 ‘양배추 전술’(cabbage tactics)을 통해 분쟁 당사국이 충돌을 회피하도록 심리적·물리적으로 압박해 섬과 암초를 강제 점령하거나 상대의 대응활동을 위축 및 무력화시키고 있다.<sup>18)</sup> 별떼 및 양배추 전술을 사용한 최근의 대표적 사례들로 2012년 필리핀이 스프래틀리 군도 내에서 실효지배 중인 스카버러 암초를 강제 점령한 사건과 현재도 지속 진행 중인 세컨드토마스

13) 정갑용, “남중국해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 논총』, 34권 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14) 김재엽, “전쟁 이외의 전략도전으로서 중국의 삼전: 특징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의 시사점,” p. 109.

15) 김주형,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관할권 강화정책과 실행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33권 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pp. 318-319.; 중앙일보(joongang.co.kr), “이 와중에 또 남중국해 분쟁...코로나도 두손 든 중 70년 야심”(검색일: 2024. 2.12.).

16) INSIDEVINA, “베트남 ‘중국의 남중국해 일방적 어업 금지조치 비난...주권침해,’”(검색일: 2024. 2.28.).

17) 연합뉴스(www.yna.co.kr). “필리핀, 남중국해서 연구활동..중과 영유권 분쟁 새 불씨되나,”(검색일: 2024. 5.20.).

18) 별떼 전술이란 수십~수백척에 이르는 중국 어선(민병대)이 특정 목표물 또는 시설을 포위, 압박하는 전술을 말한다. 양배추 전술이란 어선(민병대), 해경, 해군함정이 분쟁구역 내 특정목표물을 겹겹이 에워싸는 전술을 말한다.



암초와 티투섬에 대한 필리핀의 해상보급을 차단행위 등이 있다. 중국은 별때 및 양배추 전술의 반복적 구사를 통해 차후 여건만 조성된다면 언제든지 남중국해에서 분쟁 당사국이 실효지배 중인 암초, 섬을 강제점령에 나설 수 있는 위협과 압박을 주고 있다.

둘째, 남중국해의 상당해역을 자신의 핵심이익으로 간주<sup>19)</sup>하면서 활발한 군사활동 및 훈련을 통해 중국의 월등한 군사력 현시와 함께 자신의 주권과 권익을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과시해 상대국들이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을 회피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최전선에 있는 하이난섬에 2014년부터 항공모함과 잠수함 기지를 개발 및 확충하고 있으며 중국해군은 정례적으로 남중국해에서 미사일·함포 등 대규모 실탄 사격훈련을 주기적 실시하고 있으며<sup>20)</sup>, 최근에는 남중국해 감시 및 경비임무에 무인전력까지 서서히 투입하며 연안국들의 해상활동을 상시 감시 및 압박하고 있다.<sup>21)</sup>

여론전으로 중국은 다음의 세 가지를 언론매체 및 정부 외교채널 등을 이용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 반복하여 중국에는 국제적으로 남중국해를 중국의 내해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하며, 분쟁 당사국 및 제3국과 중립적인 세력들 대상으로는 자신의 남중국해 장악을 기정사실화 또는 용인시키고 있다.

첫째, 2016년 PCA 판결에 대한 반박과 함께 판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전을 적극 전개하였다. 외교부 등 정부 기관은 PCA 판결에 대한 반론과 중국의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문을 거듭 발표하였다. 또한 PCA 판결 전부터 각종 국제회의와 양자회담 시 자국을 지지할 국가를 물색하여, 중국언론의 주장에 따르면 PCA 판결 직전에는 중국을 지지하는 국가가 최소 66개국에 이르렀다. 특히 중국의 전통적 우방국인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언론에서 “남중국해 중재 판결은 정치적인 사건”이며 “일본이 이번 판결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중국을 공개 지지하였다.<sup>22)</sup>

둘째, 현재 점령 중인 남중국해의 모든 군도 및 암초를 중국 영토로 표시한 새로운 표준지도(Standard Map 2023)<sup>23)</sup> 발간 및 각종 SNS와 인터넷 매체를 이용 공세적

19)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를 핵심이익을 간주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하나 대체로 스프래틀리(난사군도)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에 다수 학자들이 동의한다. 이재영·황태연·반길주·지은주,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변영』(서울: 통일연구원, 2022), p. 26-27, 132; 胡波, 이진성·이희역 역, 『머헨 시대 이후 중국의 해양력』(서울: 박영사, 2021), pp. 80-82.

20) 조선일보(www.chosun.com), “시진핑, 남중국해 담당 부대 방문해 “실전훈련 강화하라””(검색일: 2024. 2.13.).

21) 박재찬,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와 해양 무기체계 무인화가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중국과 중국학』, 제45호,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22, pp. 121-122.

22) 구자선, “남중국해 관련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이후 중국의 대응,” 『IFANS FOCUS』, 2016-36,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6, pp. 2-3.

으로 인공섬과 군사시설 건설 진행현황을 선전하고 있다. SNS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중국의 선전자료들은 제3국 및 중립국에게 남중국해가 중국의 내해로 무의식적으로 각인시키고 있다.

셋째, 남중국해 개발에 따른 경제적 낙수효과를 제시하며 분쟁 당사국들의 정치지도자와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도 전통적인 남중국해 ‘공동개발’의 원칙<sup>24)</sup>은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자국의 해양강국 건설 정책에 따른 공동발전의 낙수효과를 주변 국가들과 나눌 수 있다는 ‘이익공동체론’을 남중국해 국가들에게 제시하면서 경제적 보상을 통해 남중국해를 중국이 장악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용인토록 유도하고 있다.

## 2. 동중국해 회색지대 전략 사례 분석

법률전으로 중국은 센카쿠열도의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치 않고 분쟁수역화를 통한 해양영역 확장과 더불어 자신이 일방적 주장하는 확장된 해양영역에서의 자국민간 선박, 관공선, 군함의 자유로운 활동의 법적 정당성과 명분을 국제사회에 주장 및 인정받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공식 발표하였다.

첫째,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공표하면서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식 명칭)에 대한 주권을 선언적 명시하였으며, 2012년 9월에는 ‘다오위다오 및 그 부속도서의 영해기선에 관한 정부성명’을 발표하면서 다오위다오가 갖는 영해기선과 영해선을 처음 공표하였다. 이는 일본 정부가 앞서 2012년 센카쿠 열도의 3개 섬을 민간으로부터 사들여 국유화한 것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였다. 중국 정부는 위 성명을 발표하면서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재천명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당 해역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표명하였다.

둘째, 2021년 1월 해경법과 해양안전법을 통과시켜 자국이 주장하는 관할해역에서 해경의 무기사용 및 외국선박의 항행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때 두 개의 법 모두 관할해역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으나 중국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다오위다오는 중국의 관할권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밝혔다.<sup>25)</sup> 중국은 이미 2018년 이후 센카쿠열도 해역에 진입하는 해경함정 무리 중 1척은 항상 무

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세안,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으로 남중국해 긴장 고조,” 『월간특집이슈』, 2023-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p. 4.

24) 胡波, 이진성·이희역 역, 『머헨 시대 이후 중국의 해양력』, pp. 80-88.

25) 유현정, “중국 ‘해경법’ 주요내용 분석 및 시사점,” 『이슈브리프』, 통권 245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p. 1.

장하기 시작하였으며<sup>26)</sup>, 2020년부터는 중국 해경 함정이 센카쿠열도 주변해역이 조업하던 일본 어선을 쫓아내는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sup>27)</sup> 해경법과 해양안전법의 통과로 해경의 위와 같은 활동들은 국내법에 근거한 적법한 관할권 행사가 된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2023년 11월 해양경비대 동중국해 지휘본부를 직접 시찰하면서 닌저오위다오를 겨냥해 “해상에서의 법 집행 능력을 강화하고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경비대 동중국해 지휘본부는 닌저오위다오에서의 일본 어선 단속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전해진다.<sup>28)</sup> 위와 같은 국가 지도자의 직접적인 센카쿠열도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중요성 강조와 이에 호응한 해양경비대의 관할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은 중국이 일본의 센카쿠열도에서 법 집행 수준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마무리 단계로 진입했음을 나타낸다.

심리전으로 중국은 군사적 충돌의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서도 점진적으로 어선, 관공선, 해군의 활동과 수위를 높여가는 강압적 심리전으로 일본의 센카쿠열도 실효적 지배 주장에 손상을 입히고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다음의 세 가지를 통한 물리적 역량 과시로 일본의 실효적 지배력은 균열시키고, 자신은 그 틈을 이용해 동중국해를 점차적 장악해 나가고 있다.

첫째, 2012년 ‘닌저오위다오 및 그 부속도서의 영해기선에 관한 정부성명’을 발표 후부터 센카쿠열도에 어선 뿐만 아니라 해경과 어업지도선 등 관공선의 출현 횟수와 시간, 규모가 아래 [그림 1]과 같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활동도 점차 대범해지고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다. 2016년 8월 해상 민병대가 편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선들이 일명 ‘별떼 전술’로서 200~300여 척의 어선들이 군집을 이루어 센카쿠열도에 출현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당시 중국어선과 함께 나타난 해경선 중 52척은 접속수역에 진입하였고 28척은 일본 영해까지 진입하였다.<sup>29)</sup> 현재는 중국 해경선 활동이 단순히 일본의 센카쿠열도 접속수역 및 영해선 진입에 그치지 않고 일본어선에 대한 조업 단속활동까지 나서고 있다.<sup>30)</sup>

26) Lyle J. Morris, et al, Gaining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ray Zone: Response Operations for Coercive Aggression Below the Threshold of Major War, p.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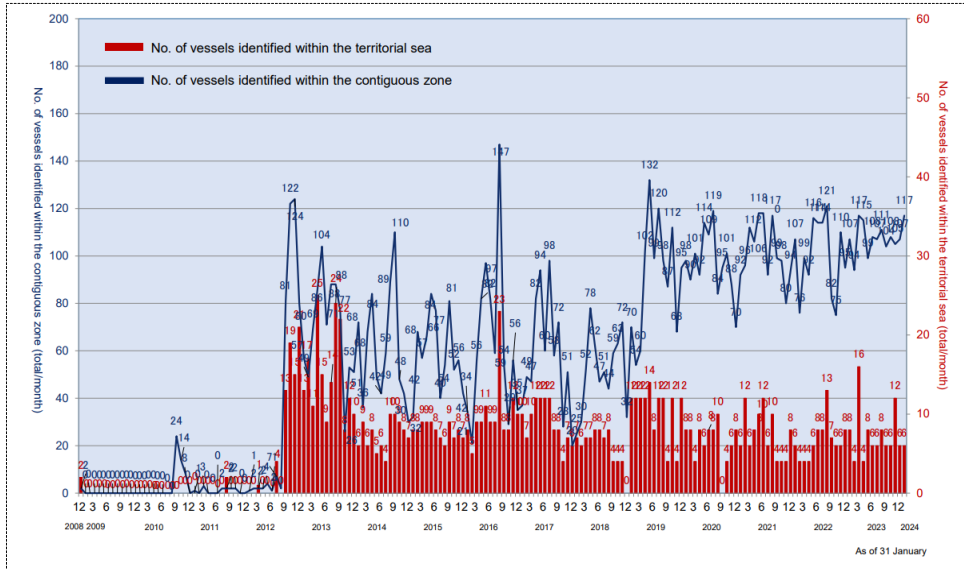
27) 장혜진, 조비연, 이상국, “중국 해경법의 주요 내용 및 안보적 함의.” 『국방논단』, 제1849호, 한국국방연구원, 2021, p. 6.

28) 연합뉴스(yna.co.kr), “중, 시진핑 1mm도 양보말라 지시에 센카쿠 일 어선 검사추진”(검색일: 2024. 2.15.).

29) Lyle J. Morris, et al, Gaining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ray Zone: Response Operations for Coercive Aggression Below the Threshold of Major War, pp. 94-96.

30) Bonny Lin, et al, Competition in the Gray Zone: Countering China’s Coercion Against U.S. Allies and Partners in the Indo-Pacific(Santa Monica, CA:RAND Corporation, 2022), p.88.

[그림 1] 중국 정부 및 다른 선박들의 센카쿠열도 영해 및 접속수역 진입횟수



\* 출처: JCG, "The Number of chinese Government and Other Vessels That Entered Japan's Contiguous Zone or Intruded into Territorial Sea Surrounding the Senkaku Islands," chart(March 31, 2022).

둘째. 중국 정부는 2010년 전후로 다오위다오를 자국의 핵심이익범주로 포함시키면서 핵심이익의 수호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해군함정을 점차 공세적으로 센카쿠열도 해역으로 진입시키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후부터 국가 핵심이익에 대한 강조와 함께 이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sup>31)</sup> 이러한 국가정책 기조 속에서 2016년 6월 군함이 일본 센카쿠열도의 접속수역을 침범하여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과 2시간 여를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일본 센카쿠열도 접속수역 내에서 중·일 군함 간 최초의 직접적인 대치였다.<sup>32)</sup> 이 사건 이후 중국은 매년 전투함 뿐만 아니라 구조함, 정보함, 호위함 등 다양한 군함들을 일본의 센카쿠열도 접속수역 및 영해에 진입시키고 있다.

센카쿠열도 해역에서 중국해군의 위와 같은 활동양상들은 자국의 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단호히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일본에 경고 및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국이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다오위다오를 넘어 동중국해를 자신의 핵심이익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시<sup>33)</sup> 앞으로 중국

31) 2013년 제8차 집체학습에서 시진핑은 해양분쟁 시 "평화와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면서도 정당한 권익은 포기할 수 없으며 국가의 핵심이익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고 강조하였다. - 胡波, 이진성·이희영 역, 『머맨 시대 이후 중국의 해양력』, pp. 80-81.

32) 한겨레(m.hani.co.kr), "중국 '영토분쟁 센카쿠 해역'에 군함 첫 진입"(검색일: 2024. 2.10.).

은 센카쿠열도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전반을 장악하기 위해 해군함정들 보다 공세적으로 운용할 것이라 전망된다. 실제로 중국은 2022년부터 센카쿠열도를 포함해 자신이 주장하는 동중국해 CHADIZ 경계선 부근에 해군함정 3척을 상시 전개시키고 있으며,<sup>34)</sup> 러시아와는 대규모 연합 해상훈련을 주기적으로 센카쿠열도 해역을 넘어 동중국해 전반에서 진행하고 있다.<sup>35)</sup>

셋째. 중국은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강압적 심리전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다오 위다오 및 그 부속도서의 영해기선에 관한 정부성명’ 발표 이후 전격적으로 2013년 11월 센카쿠열도와 이어도까지 동중국해 일대 상공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CHADIZ)를 일방적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의 연속적 시행은 중국이 동중국해 장악을 치밀하게 준비 및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자위권’에 근거하여 일방적 선포되므로 국제법적 효력은 갖지 못하나, 중국은 CHADIZ 선포를 바탕으로 해당 구역을 통과하는 타국 항공기들에게 비행계획 사전 제출 요구<sup>36)</sup>와 함께 센카쿠열도 주변해역에서 중국 공군기들의 비행활동을 지속 증가시키며 일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sup>37)</sup>

여론전으로 중국은 언론매체 및 사이버 영역, 정부 외교채널 등을 이용한 다음의 두 가지를 통해 제3국과 중립적인 세력들이 자국을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본이 센카쿠 열도의 실질적 지배를 위해 취하는 주요 주권적 조치에 대해서는 자국내 반대여론을 응집시켜 일본이 추가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을 압박하고 주저하게끔 하고 있다.

첫째. 2012년 일본이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이를 영토주권 침해로 규정하면서 영토 수호를 위한 자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제3국 및 중립국에게는 센카쿠열도가 의심과 다툼의 여지없이 일본이 실효 지배중인 곳이 아닌 분쟁지역으로 인식되게끔 대대적인 여론전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기관 및 각종 민간 단체들은 반대 담화를 연달아 발표하였으며, 중국 외교부 및 언론매체는 이를 국내·외 대대적 보도하였다. 또한 중국정부의 비호 아래 수많은 민간 해커들이 일본

33) 이민규,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 시기별 외연 확대 특징과 구체적인 이슈,” 『중소연구』, 아태지역연구센터, 통권 153호, 2017, pp. 50-52.

34) 연합뉴스(yna.co.kr), “중, 일방적 동중국해 방공식별권에 군함 상시 배치”(검색일:2024. 2.17.).

35) 조선일보(www.chosun.com), “중·러와의 군사밀착...동중국해서 또 합동군사훈련한다”(검색일:2024. 2.18.).

36) Mercedes Trent, *Over the Line: The Implications of China's ADIZ Intrusions in Northeast Asia*(Washington, D.C: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2020), p. 11.

37) 센카쿠열도 일대 해역에서 증가된 중국 군용기 활동결과 2015년 이후 중국은 일본 항공자위대의 요격기 출격에서 가장 많은 대상국으로 기록되고 있다. - 김재엽, “전쟁 이외의 전략도전으로서 중국의 삼전: 특징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의 시사점,” p.107.

각종 웹사이트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이러한 행동을 선전 및 독려하면서 젊은 세대들의 애국심을 고취시켰다.<sup>38)</sup>

둘째. 해경과 해군 함정들의 센카쿠열도 해역에서의 활동과 이에 따른 자국 법의 집행결과를 언론에 꾸준히 노출시키며, 동중국해를 장악해 가는 자국의 활동을 제3국과 심지어 일본 국내적으로도 점차적 용인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 해경선들은 2010년대는 센카쿠열도 해역 진입 시 일본에 포착되지 않도록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꺼두었지만 2023년 부터는 센카쿠열도 해역 진입 시 AIS를 켜 채로<sup>39)</sup> 센카쿠열도 주변해역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선을 쫓아내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해군은 2012년부터 ‘동해협력작전-2012’를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서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은 중국이 2012년 다오위다오 영해기선 발표 이후부터 시작된 훈련으로 통상적으로 ‘주권 순찰’ 중인 자국 해경함정과 어업지도선이 타국 순시선과 충돌할 경우 해군이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작전을 통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다분히 일본을 겨냥한 훈련으로 매 훈련시 마다 중국 국방부와 관영매체에서 훈련일정과 내용의 공개적 보도를 통해 자국 해군의 센카쿠열도 해역에서 활동에 자신감을 드러내는 한편 일본을 상대로는 센카쿠열도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자국 해경 및 관공선의 “일상적” 활동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압박하고 있다.<sup>40)</sup>

### 3. 한반도 근해<sup>41)</sup> 회색지대 전략 사례 분석

법률전으로 중국은 서해 및 이어도 일대 해역에서 우리나라와 아직 합의되지 않은 해양경계 획정의 빈틈을 이용해 해양영역을 확장시키고 자신이 일방적 주장하는 확장된 해양영역에서의 자국 민간 선박, 관공선, 군함의 자유로운 활동의 법적 정당성과 명분을 국제사회에 주장 및 인정받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공식 발표 및 진행 중에 있다.

첫째. 중국은 우리나라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해양관할권 분쟁에서 국제적 판례로 우선시하는 ‘등거리 및 중간선 원칙’을 대신하여 당사국의 해안선 길이와 국토면적 및 인구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형평의

38) 유재광, “중국 회색지대 강압 전술의 진화,” 『전문가 오피니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p. 2.

39) THE EPOCH TIMES(kr.theepochtimes.com), “중 잇달아 센카쿠 침범... 대만 침공 위한 미군 분산작전”(검색일: 2024. 2.15.).

40) 한겨레(www.hani.co.kr), “중국, 센카쿠 주변 해역서 군사훈련”(검색일: 2024. 2.17.).

41) 본 연구에서 한반도 근해는 거리적 개념이 아닌 현재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이 전개 중인 서해 및 이어도 일대 해역과 차후 회색지대 전략 전개가 예상되는 한·일 공동 개발구역(JDZ)를 칭한다.

원칙'을 일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12년 12월 UN 대륙붕위원회에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대륙붕 경계가 이어도를 포함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진다는 대륙붕 경계안을 제출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형평의 원칙, 대륙붕 경계안 주장을 토대로 서해 상당해역과 이어도가 당연히 자국의 관할수역에 포함되는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기반으로 중국은 2012년 3월 국가해양국장이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어도 주변수역이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되므로 이어도를 정기순찰 해역에 포함시키고 이어도 주변 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둘째. 중국은 2013년 동경 124°선을 자국 해군의 해상작전구역(AO)으로 일방적 선언하여 서해 전체 해역의 약 70%를 작전구역으로 편입시켰다. 중국은 2013년 방중한 우리해군 참모총장에게 “동경 124°E 선을 넘지말 것”을 공식 요구하였으며<sup>42)</sup>, 이를 시작으로 중국은 동경 124°선 고착화를 위한 일련의 군사적 조치들을 계속 전개하고 있으나 중국의 124° 작전경계선 주장에는 어떠한 법적, 역사적 권원도 없으며 중국도 합당한 근거를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sup>43)</sup> 하지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법적, 역사적 권원이 없는 9단선을 기반으로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에서 비추어 볼 때 중국은 자국해군의 작전구역 경계선으로 동경 124°선 고착화를 계속 시도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와 해양경계획정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명분 쌓기 용으로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포함한 서해 일대에 다수의 해상관측용 부표와 어업 양식용 시설물 1개를 [그림 2]와 같이 설치하였다. 이는 '22년 8월 기준 우리 정부와 해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며, 현재는 서해 일대에 추가적으로 설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특히 한중잠정조치수역 내에 부표와 구조물을 우리정부와 협의없이 설치한 것은 한·중 어업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나, 중국은 부표는 단순 해상기상 수집 목적이며 구조물은 어업에 쓰는 양식 관련 부대시설이라고만 밝히며 한·중 어업협정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sup>44)</sup> 국제법적으로 이러한 부표와 구조물 설치가 추후 우리나라와 해양경계획정에서 중국의 '형평의 원칙'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는 없으나, 중국은 설치한 부표와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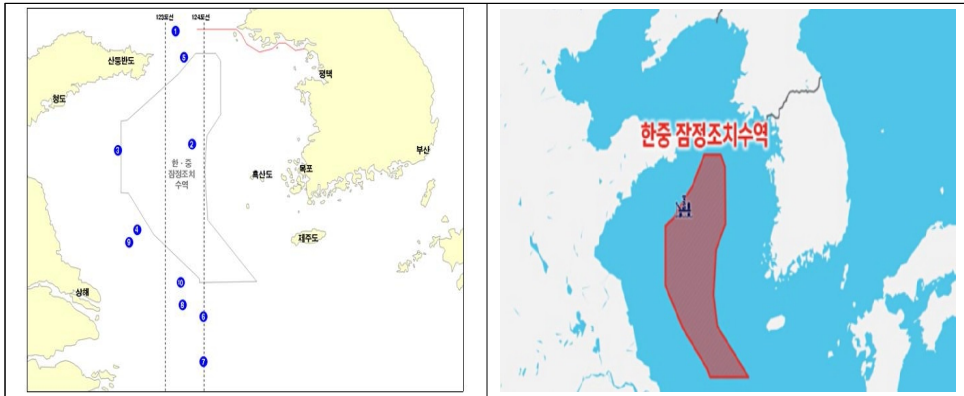
42) 당시 해군참모총장 최윤희는 한국해군은 북한의 해상침투에 대비한 경계작전을 위해 동경 124°E를 넘어 작전을 펼쳐야 하므로 중국 측의 일방적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 중앙일보(mnews.joins.com), “최윤희의 퍼스펙티브| 중국 ‘동경 124°E 서해 넘어와 작전하지 말라’(검색일: 2024. 1. 5.).

43) 중국은 1962년의 북·중 변계조약 및 1964년 변계의정서에 따라 육상경계의 서측 한계인 124도-10분(E)의 180°(T) 연장선을 북·중 간 해양경계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 경계선을 바탕으로 NLL 이남으로 연장한 124°E 선을 한·중 간 해양경계로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강승규, 황상현, 최구식, “중국해군의 서해 군사활동 증가 시사점 및 대응방안”, 『한국군사학논총』, 제7집 2권, 미래군사학회, 2018, p. 82.

44) 조선일보(chosun.com), “한·미 잠수함 탐지, 중국, 한국쪽 서해에 대형 부표 9개 띄워”(검색일: 2024. 2. 18.).

을 활용한 실효적 지배라는 억지주장을 펼치며 협상에서 우리나라를 심리적 압박할 수 있다.

[그림 2] 서해 및 이어도 일대 중국 해상관측용 부표 및 시설물 설치 현황



\* 출처: 연합뉴스(yna.co.kr), “중, 서해 중간수역에서 혼란 올해만 10회 육박”(검색일: 2024. 2. 18.); SBS뉴스(news.sbs.co.kr), “잠정조치수역에 등장한 중국 구조물...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인가?(검색일: 2024. 2. 18.).

심리전으로 중국은 군사적 충돌의 임계점을 넘어서지 않는 한에서 점진적이면서도 모호하게 민간어선과 관공선, 해군의 활동과 수위를 높이는 강압적 심리전을 통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물리적 대응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면서 우리 관할해역 내로 진입과 함께 관할해역 내에서 활동을 “일상화”시키고 있다. 이는 추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와 마찬가지로 서해와 이어도 일대 해역에서도 중국이 일방적 주장하는 자신의 해양영역에서 일정수준의 관할권을 행사 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를 위해서 아래 세 가지를 시행 중에 있다.

첫째, 중국은 자국 어민들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바깥인 우리 해역 내에서 행하는 불법조업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면서 점진적으로 서해 전체를 자신들의 일상적인 활동권으로 잠식해가고 있다. 특히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서해에서 남·북 간 특수성을 이용해 한국해경 단속이 힘든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활발히 하고 있으며, 심지어 연평도와 한강 하구와 같이 서해 연안 깊숙한 위치에서도 불법조업을 서슴치 않고 있다.<sup>45)</sup> 심지어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우리 해경에게 선체 충돌 감행 또는 도끼 등의 흉기류 투척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여 단속과정 간 해경들의 인적·재산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둘째, 중국 해군함정들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이어도를 포함해 서해 전 해역에서

45) 경기일보(kyeonggi.com), “한강 하구까지 올라온 중 어선 무력단속 쉽지않고..대책 답답”(검색일:2024. 2.18.).



중간선, 즉 우리 관할해역으로 진입횟수를 2016년 60여회, 2017년 80여회, 2018년 230여회, 2019년 290여회로 점차 증가시켜가며 진입의 ‘일상화’를 달성하였다.<sup>46)</sup> 중국은 국제법상 영해 및 접속수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폭 넓게 인정되는 항행의 자유를 이용하여 서해 중간선을 넘어 우리 관할해역으로 진입을 일상화한 것이다. 반면에 중국해군은 우리해군의 동경 124°E 이서(以西)에서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작전구역 경계선인 동경 124°선을 근거로 밀착 감시하며 “즉각 나갈 것”을 경고통신하며 우리 해군의 행동을 제약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sup>47)</sup>

중국은 센카쿠열도 해역에서와 동일하게 서해에서도 해상 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강압적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11월 동중국해에서 센카쿠열도 해역 뿐만 아니라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CHADIZ)을 일방적 발표하였다. 이후 중국 공군기 및 해상초계기들의 KADIZ 진입이 증가하여 중국 군용기는 2018~2020년 동안 서해 KADIZ를 60번 이상 침범하였으며, 중국 해상초계기는 현재 동경 123도~124도 상공을 매일 수차례 비행하고 있다.<sup>48)</sup>

셋째, 중국은 위에서 설명한 우리 관할해역으로 진입의 “일상화”와 함께 우리 관할해역 내에서 활동을 <표 1>과 같이 “일상화”시켜 자신이 일방적 선언한 해군 작전구역(AO)의 경계선인 동경 124°선 고착화를 진행하고 있다.

<표 1> 2014년 이후 우리나라 관할해역 내 중국해군 활동현황

2014~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개 자료 없음	110여 회	110여 회	240여 회	310여 회	220여 회	90여회 *상반기 기준	150여회 *10월 기준

\* 출처: 김남수, “중국해군의 공세적 서해진출 전략 분석과 한국해군의 대응전략 발전방향.” 『해양안보』, 6권 1호, 2023, p. 12.

이는 중국이 일방적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만큼을 해군의 작전구역으로 삼고자 하며, 차후 우리나라와 관할권 해양경계획정 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 선점을 위한 강경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군사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한 여건조성 차원에서 중국은 동경 124°선 고착화를 위해 2017년 3월 이후부터

46) 김덕기, “중국의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군사활동 동향 및 전망,” 정책보고서 시리즈, 2022-01, 한국해양전략연구소, p. 41.

47) 조선일보(www.chousun.com), “[단독] 중 서해 124도에 멋대로 경계선...올 100여차례 군사훈련, 영해화 노려”(검색일: 2024. 2.19.).

48) 김덕기, “중국의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군사활동 동향 및 전망,” p. 41.; 중앙일보(www.joongang.co.kr). “[단독] 백령도 40km 앞까지 왔다, 中 군함 대놓고 서해 위협”(검색일: 2024. 2.19.).

서해에 경비함정 2척을 추가 배치하여 백령도 서방, 대청도 서방, 흑산도 서방 해역에 경비함정 5척이 24시간 365일 공백이 없도록 정기적인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sup>49)</sup>

여론전으로 중국은 언론매체 및 정부 채널 등을 통한 다음의 세 가지를 통해 서해 및 이어도 일대 해역에서 한·미 동맹 및 한국해군의 활동을 비난, 경고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 및 위축시키고 있으며,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 반복하여 분쟁 당사국 및 제3국과 중립세력에게는 서해를 점차적으로 중국의 내해로 인식 및 각인 시켜가고 있다.

첫째. 중국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한·미 연합 훈련을 위해 미국함정, 특히 항공모함이 서해에 진입하는 것을 정부 기관 및 언론매체에서 거세게 비난, 경고해왔다. 그 이유는 중국은 미국과 패권경쟁 속에서 유사시에 무력 충돌 가능성을 대비하여 수도 북경 및 연안 경제특구, 핵심이익(대만, 센카쿠열도 해역, 남중국해 일대)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안전수역(Sanctuary)을 확보하고자 동중국해 및 서해를 자신의 내해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sup>50)</sup> 실제로 중국은 2010년 한·미 연합훈련 참가를 위한 미 항모 조지워싱턴함의 서해 진입을 정부 및 언론매체 등을 동원한 비난, 경고로 무산시켰다.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미국 항공모함은 중국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서해로 진입하지 않고 있다.

둘째. 중국은 2012년 3월 국가해양국장이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 주변수역이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므로 이어도를 중국의 정기순찰 해역에 포함시키고 이어도 주변 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중국은 주기적으로 국방부·해군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해군의 동경 124°E 이서(以西) 해역에서의 정상적 활동에 대해 자신의 관할권을 침범했다는 억지 주장이 담긴 구두 항의 및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sup>51)</sup> 이는 현장에서 중국함정이 우리해군의 동경 124°E 이서(以西) 활동에 대한 경고통신 실행의 자체적 명분과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국은 동경 123~124°에서 군사훈련을 언론에 꾸준히 노출시키며, 서해를 장악해 가는 자국의 활동을 제3국과 심지어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도 점차적 용인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우리 관할해역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해상훈련을 20여 회 실시하였으며, 2022년에는 동경 123~124도에서 총 6차례 군사훈련

49) 김덕기, “중국의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군사활동 동향 및 전망,” p. 41.

50) 김남수, “중국해군의 공세적 서해진출 전략 분석과 한국해군의 대응전략 발전방향,” 『해양안보』, 6권 1호, 2023, p. 9.

51) 강승규·황상현·최구식, “중국해군의 서해 군사활동 증가 시사점 및 대응방안”, 『한국군사학논총』, 제7집 2권, 미래군사학회, 2018, p. 84.

과 실탄사격을 예보했었다.<sup>52)</sup> 이러한 의도적 군사훈련 공개에서 주목할 점은 2020년 전후로 동경 124도 인근에서 중국 잠수함이 의도적인 부상 항해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반복적 노출시키고 있다.<sup>53)</sup> 이는 자신이 주장하는 작전구역(AO) 인근에서 잠수함 항해는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지 않는 일상적 행위임을 과신해서 서해를 장악하는 자신의 활동을 제3국에서 자연스럽게 용인하는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판단된다.

#### 4. 해역별 해양 회색지대 전략 전개 양상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중국의 해역별 해양 회색지대 전략 전개 양상을 삼전(법률전·여론전·심리전)의 영역 차원에서 비교해보면 <표 2>와 같이 전개 양상 중 일부에서는 유사한 수위를 띄나, 다수의 전개 양상에서는 분명한 수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 해역별 해양 회색지대 전략 전개양상 비교

구분	한반도 근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법률전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해법 및 영해기선 공표</li> <li>• 해경법과 해양안전법 적용해역으로 센카쿠열도 포함</li> <li>- 일본어선 퇴거</li> <li>- 일본어선 단속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해법 공표 및 9단선 주장</li> <li>• 국제판결(PCA) 불인정</li> <li>• 암초 및 산호초 군사기지화</li> <li>• 군도 및 암초 행정구역 편입</li> <li>• 어업금지령 주기적 발효</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해역 확장 시도를 위한 법적 명분 조성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실효적 지배 미인정</li> <li>• 주권 주장을 위한 관할권 행사 여건조성 마무리 단계 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판결 미수용 및 거부</li> <li>• 관할권 행사단계 진입</li> <li>- 강제적 물리력, 행정조치</li> </ul>
심리전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민 불법조업</li> <li>• 관할해역 진입 일상화 및 해군 진출 확장</li> <li>- 영해·접속수역 미침범</li> <li>- 접속수역까지 근접</li> <li>• 항공기 KADIZ 진입 일상화</li> <li>- chadiz 일방적 선포</li> <li>• 해군 작전구역 고착화</li> <li>- 작전구역에 경비 임무수행 군함 상시 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떼 전술 구사</li> <li>• 관할해역 진입 일상화 및 해군 진출 확장</li> <li>- 영해·접속수역 침범</li> <li>- 동중국해에 경비 임무수행 군함 상치 배치</li> <li>• 항공기 JADIZ 진입 일상화</li> <li>- CHADIZ 일방적 선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떼전술, 양배추 전략 구사</li> <li>- 필리핀 실효지배 암초 강제 점령</li> <li>- 필리핀 해상보급 차단 지속</li> <li>• 월등한 군사력 상시 현시</li> <li>- 유인전력에 추가한 무인전력을 경비임무에 추가</li> <li>• 정례적 대규모 훈련 진행</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해역 내 진입 일상화 진행</li> <li>• 관할해역 내 활동 일상화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실효적 지배력 균열 시도</li> <li>• 핵심이익 수호를 위한 군사력 사용의지 경고 및 과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실효적 통제 과시</li> <li>• 무력사용을 통한 현상변경 달성</li> <li>• 핵심이익 수호를 위한 군사력 사용의지 경고 및 과시</li> </ul>

52) 문화일보(m.munhwa.com), “중 서해 내해화 의도 노골화…중 해상전력에 의해 서해바다 병들고 있다.”(검색일: 2023. 1. 9.); 조선일보(www.chosun.com), “[단독] 중 서해 124도에 멋대로 경계선...울 100여차례 군사훈련, 영해화 노려”(검색일: 2024. 2.19.).

53) 중앙일보(mnews.joins.com), “EEZ도 확정 못한 한-중, 영키고 영킨 경계선은 시한폭탄”(검색일: 2023. 2. 6.); 아시아경제(asiae.co.kr), “중국 핵잠수함 이번엔 서해 앞바다 출현”(검색일: 2023. 1.28.).

구분	한반도 근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여론전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센카쿠 열도 국유화 반대</li> <li>• 여론 조성 및 항의</li> <li>• 군함활동 언론 의도적 노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판결(PCA) 반박 및 결과 불인정 여론 전개</li> <li>• 새로운 중국 표준지도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점령 중인 남중국해 모든 군도, 압초 중국 영토로 표시</li> </ul> </li> <li>• 인공섬과 군사시설 건설 진행 현황을 선전</li> <li>• 남중국해 개발 낙수효과 홍보</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해군의 활동 위축 강요</li> <li>• 중국의 활동 용인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남중국해 실효적 통제 기정사실화 및 각인</li> <li>• 중국의 활동 용인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국 및 분쟁 당사국 포함</li> </ul> </li> </ul>

\*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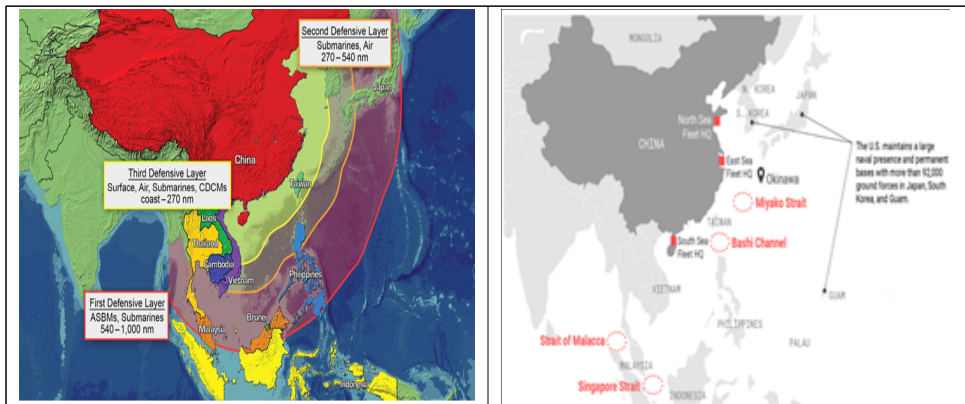
법률전·심리전·여론적 영역에서 모두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 근해 순으로 전개양상의 수위가 높으며, 이에 따른 현상변경에 따른 기정사실화의 진행 정도 역시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 근해 순으로 높다. 남중국해는 일각에서 중국의 내해를 넘어 호수라고 부를 만큼 회색지대 전략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중국은 남중국해의 상당한 해역에서 법률전 영역에서는 자국이 주장하는 역사적 근원 및 국제법에 부합하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심리적 영역에서는 압도적인 군사적 우월을 통한 심리적 강압의 극대화로 2012년에는 스카버러 압초를 강제 점령 이후에는 추가적인 직접적 군사적 충돌없이 실효적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여론전 영역에서도 중국의 남중국해 실효적 통제를 기정사실화 및 각인시키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위와 같은 남중국해와 비교해서 현재까지 한반도 근해에서 회색지대 전략 전개 양상 수위는 법적 명분 조성 및 우리 관할해역으로 진입을 일상화하는 수준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해군의 중국 회색지대 전략 대응방향 수립에 있어서 주목할 부분은 위 <표 2>에서 동중국해의 회색지대 전개 양상 및 그 수위이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전개 양상의 수위 측면에서 동중국해는 한반도 근해와 남중국해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데, 중국은 점차적으로 한반도 근해에서 동중국해 수준의 회색지대 전략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중국은 국가 차원의 대전략인 해양강국 달성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서해와 이어도 일대를 자국의 '내해'로 만들어 이곳의 경제적·군사적 가치를 차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서해와 이어도 일대 해역을 내해로 만들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와 EEZ 경계획정을 위한 회담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유사시 미국과 해양에서 대규모 군사분쟁을 대비한 군사적 안전수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서해는 미국 해군정보국에서 분석한 중국의 해양방어권 개념에서 수도 북경 및 연안 경제특구, 그리고 핵심이익(대만, 남중국해, 센카쿠열도 해역)을 보호하기 위한 최종 방어권인 3방어권에서 가장 외측에 위치한 해역이다. 또한 이어도 일대 해역은 중국 북해·동해함대의 함정과 잠수함이 서태평양 진출로인 미야코 해협으로 나아가기 전 거치는 통로이며, 한국, 중국, 일본의 중간에 위치하여 수상·수중정보와 해양정보를 획득하기에 용이한 해역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어도 일대를 차지할 경우 서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sup>54)</sup> 즉 중국에게 서해는 안보적으로 [그림 3]과 같이 자신의 해군전략인 ‘근해방어’ 달성에 필요한 군사적 안전수역(Sanctuary)과 ‘원해방위’ 실현에 필요한 태평양 진출로의 가치를 지닌 군사적 가치를 갖는다.

[그림 3] 서해 및 이어도 일대 해역의 군사적 가치



\* 출처: U.S. Navy. *The PLA Navy: New Capabilities and Missions for the 21st Century*, p. 8; Defense Priorities(defensepriorities.org), “Assessing Chinese maritime power”(검색일: 2024. 1.15.).

위와 같은 서해, 그리고 이어도 해역이 갖는 경제적·군사적 가치를 고려시 차후 중국이 서해, 그리고 이어도 해역을 자신의 핵심이익으로 주장할 가능성 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진핑 이후 중국의 핵심이익은 점차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동중국해에서도 중국은 기존 센카쿠열도 해역을 넘어 동중국해 전반을 핵심이익으로 칭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sup>55)</sup> 추후 중국이 핵심이익

54) 중국 연안의 서해/동중국해는 수심이 얇은 대륙붕이므로 항모전단의 원활한 서태평양 진출을 위해서는 30m 이상 수심이 확보되는 이어도 인근해역인 동경 124°E선 부근에서의 항해가 필요하다. - 고봉준. “독도, 이어도 해양영토분쟁과 한국의 복합 대응”. 『한국정치연구』, 22권 1호. 서울: 한국정치연구소. 2013. pp. 201-202.

55) 이재영·황태연·반길주,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변영,” pp. 26-27.

으로 서해 및 이어도 일대 해역을 포함할 경우 서해 및 이어도 일대 해역을 차지하기 위한 해양 회색지대 전략의 공세성을 보다 강화될 것이다. 실제 일본의 센카쿠열도 해역도 2010년 전후로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포함된 이후부터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 전개가 본격적으로 공세성을 띄기 시작하였다.

#### IV. 한반도 근해 회색지대 전략 양상 전망 및 우리해군 대응책

앞서 III장 4절 해역별 해양 회색지대 전략 전개 양상 비교 분석결과 우리해군은 차후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서해 및 이어도 일대 해역을 포함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금 부터라도 치밀하게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중국이 앞으로 한반도 근해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할 경우 어떠한 양상을 펼 것인지를 법률·여론·심리전으로 구분해 전망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해군의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 1. 한반도 근해 회색지대 전략 양상 전망

먼저 법률전 영역에서 첫째로 중국은 지속적으로 ‘형평의 원칙’을 일방적 주장하면서 점차적으로 자신이 장악한 해양영역에서의 ‘관할권 행사’를 시도할 것이다. ‘형평의 원칙’은 해군 뿐만 아니라 군용기와 어선, 관공선 등이 서해 및 이어도 일대 해역에서 활동영역을 점차 넓혀갈 수 있는 법적인 명분과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관할권 행사’는 자신의 해양영역 장악과 실효지배를 기정사실화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 관할권 행사는 초기에는 우리나라 조업 어선을 비정기적 퇴거하는 수준에서 점차적 수위를 증가시켜 해경법과 해양안전법을 근거로 정기적 또는 고강도의 치안활동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유엔해양법을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 해석하여 자신이 일방적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타국의 해군 활동은 평화적 해양사용을 위반한다는 명분으로 우리해군 뿐만 아니라 미국해군 함정의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sup>56)</sup>

둘째, 중국은 2012년 12월 UN 대륙붕위원회에 제출한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대륙붕 경계가 이어도를 포함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진다는 대륙붕 경계안을 토대로 한·일 간 공동개발구역(JDZ) 협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일본이 1974

56) 중국은 유엔해양법 협약 88조(공해의 평화적 목적의 사용)을 근거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허가 없이 군사적 활동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국가이다. - 배학영, “중국 해양세력의 서해상 활동증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p. 88.

년에 체결한 한일 남북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협정 만료(2028년) 3년 전인 2025년 연장 합의 또는 종료를 서면통고 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한·일이 양국이 연장 합의에 실패할 경우 중국은 이 기회를 틈타 자신이 일방적 주장하는 동중국에서의 대륙붕 경계에 따른 권리를 강하게 주장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와 해양경계협정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서해와 이어도 일대에 관측용 부표와 해상구조물을 추가적 설치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설치된 부표에 잠수함 탐지용 청음과 같은 군사적 기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sup>57)</sup>, 추후에는 부표를 추가 설치할 때는 수상함 및 잠수함 탐지, 해양정보수집과 같은 특정한 군사적 기능을 탑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중국이 2016년부터 괌 주변 심해에서 남중국해로 진입하는 미국해군 잠수함의 스크류 소리 등을 음향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최첨단 청음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다.<sup>58)</sup> 또한 중국은 이어도에서 불과 서북방 4.5km 떨어진 파랑초에 해양과학기지와 같은 해상구조물을 설치할 수도 있다. 특히 이어도에서 불과 서북방 4.5km 떨어진 파랑초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발견했다는<sup>59)</sup> 점을 명분으로 내세워 우리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맞대응 하는 차원에서 파랑초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해 해양관할권 확장에 이용할 것이다.<sup>60)</sup>

심리전 영역에서 중국은 점차적으로 관할권 행사가 가능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고강도의 물리적 역량 과시로 우리의 물리적 대응·대결 회피를 반복·누적시켜 나갈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리더십 차원 뿐 아니라 현장 차원에서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전략 전개에 대응하는 관공선, 해경·해군함정의 사기와 자기 확신을 저하시켜 우리의 제반 대응능력을 저하시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첫째로 중국은 해군 작전구역 동경 124°선 고착화를 지속 추진하며, 이것이 어느정도 마무리된다면 해군 작전구역이 자신이 일방적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더욱 확장을 시도할 것이다. 실제로 중국 함정들은 이미 2021년 부터 해군 작전구역(AO)인 동경 124°를 넘어 백령도와 흑산도 근해 우리 접속수역 인근까지 서해 깊숙하게 진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경 124°선 이동(以東)으로 더욱 동진할 것으로 전망된다.<sup>61)</sup> 특히 중국해군은한국해군의 대응 척수 부족에

57) 국회사무처, “2018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부록.서면질의 답변서(피감사기관: 해군본부)”, 대한민국 국회, 2018, p. 61, 220, 221.

58) South China Morning Post(SCMP.com) “Surveillance under the sea: how China is listening in near Guam.”(검색일: 2024. 2.18.).

59) 제주일보(www.jejunews.com), “이어도 옆 암초 파랑초”(검색일: 2024. 2.24.).

60) 아주경제(ajunews.com), “[강효백 칼럼] 제2의 이어도 파랑초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자”(검색일: 2024. 2.24.).

서 생길 감시공백 및 대응시간 지연의 문제점을 동경 124°선 이동(以東) 동진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앞으로 개발될 다수·다종의 무인전력(항공기, 수상함 등)을 적극 투입할 것이다.

둘째. 중국은 해군 작전구역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일방적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우리해군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시키기 위해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강력한 신무기의 시험을 포함하는 무력시위 등의 물리적 역량을 적극 과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동경 124°를 넘어서 우리의 접속수역 근처까지 훈련구역으로 포함하는 대규모 해·공군 합동훈련을 공개적 또는 불시에 진행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2023년 3월 동경 124°를 동쪽 경계로 하는 해상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한 사례가 있으며, 동경 123~124°에서 서울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구역을 14시간 동안 해상훈련을 위한 항행금지구역으로 선정하였다.<sup>62)</sup> 또한 중국은 법적으로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는 상대국의 승인이 필요치 않다는 점을 이용해 현재의 서해 CHADIZ를 동쪽으로 더욱 확장시켜 KADIZ를 넘어 자신이 일방적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서해에서 해양에서 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활동을 보다 증가시켜 우리나라를 더욱 압박할 것이다.

셋째. 중국은 이어도 일대에서 이른바 ‘별떼 전술’을 사용해 우리를 압박할 것이다. 이는 이어도 일대 해역을 사수하는 우리의 의지를 시험 및 점차적으로 균열을 일으키는 동시에 국제 분쟁수역화를 시도하는 목적을 가진다. 중국은 이미 동중국해에서는 센카쿠열도 일대 해역에서는 수백 여척의 어선들이 별떼처럼 떼를 지어 출몰하고 있으며 해경 함정들은 어선들을 후방지원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전술을 앞으로 이어도 일대 해역에서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어도에서 불과 서북방 4.5km 떨어진 파랑초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발견했다는<sup>63)</sup> 점을 명분으로 내세워 별떼 전술을 통해 지속적 포위를 유지한 채로 이어도 일대 해역을 장악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어도 일대 해역을 장악해 나갈 경우 법률전에서 설명한 이어도 일대에 관측용 부표와 해상구조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으며, 특히 파랑초에 해상구조물을 설치할 가능성이 높다. 파랑초에 해상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우리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설치·운영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해양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해상구조물에 해상·수중 감시 기능

61) 중앙일보(mnews.joins.com), “[단독] 中 또 다시 서해 무단진입... 이번엔 ‘스파이 군함’ 보냈다”(검색일: 2023. 1.10.); 중앙일보(mnews.joins.com), “[단독] 백령도 40km 앞까지 왔다, 중 군함 대놓고 서해 위협”(검색일: 2023. 1.10.).

62) 조선일보(www.chosun.com), “[단독] 중 서해 124도에 맞대로 경계선...을 100여차례 군사훈련, 영해화 노력”(검색일: 2024. 2.24.).

63) 제주일보(www.jejunews.com), “이어도 옆 암초 파랑초”(검색일: 2024. 2.24.).



을 은밀하게 설치할 경우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함정과 잠수함의 활동을 원격에서 감시할 수 있는 상당한 군사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여론전 영역에서 첫째, 중국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이용해 관할권 주장 근거인 ‘형평의 원칙’을 지속 선전할 것이며, 이어도와 파랑초를 국제적 분쟁수역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어도와 파랑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선전해 영토 수호를 위한 자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제3국 및 중립국에게는 이어도와 파랑초가 의심과 다툼 여지없이 우리나라 관할권에 속하는 곳이 아닌 중국과 분쟁해역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 및 군 고위급 회담 또는 외교 채널을 이용해 서해와 이어도 일대 해역에서 우리해군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 및 위축시키기 위해 억지 항의 및 요구를 반복할 것이다.

둘째, 2028년 한-일-간 공동개발구역(JDZ) 협약 만료를 대비해 7광구 개발에 개입하기 위한 여론전을 적극 실시할 것이다. 중국은 2012년 12월 UN 대륙붕위원회에 제출한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대륙붕 경계가 이어도를 포함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진다는 대륙붕 경계안을 적극 선전하면서 이에 대한 우호국가 및 제3국가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정부 고위자들은 관영매체 및 여러 언론매체를 이용 다오위다오를 넘어 동중국해를 자신의 핵심이익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7광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핵심이익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셋째, 서해와 이어도 일대 해역에서 관영매체 및 다양한 언론매체를 이용 자신의 활동을 지속 선전 및 의도적 노출시킬 것이다. 앞서 설명한 의도적인 잠수함의 부상 항해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에서 주기적 실시하는 ‘동해협력작전-2012’ 처럼 우리의 정당한 관할권 행사를 부정하는 대대적인 군사훈련 계획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활동에 자신감과 정당성을 드러내 제3국과 중립세력에게 서해와 이어도 일대 해역을 점차적으로 중국의 내해로 인식 및 각인시키는 목적을 띠 것이다,

## 2. 우리해군 대응개념: 삼전의 전개 효과 ‘무력화’ + 규범·규칙에 기반한 해양 질서로 ‘환원’

우리해군은 중국이 해양영역 확장을 위해 구사하는 해양 회색지대 전략은 국가 대 전략인 해양강국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점하고 있는 모든 해역(남중국해, 동중국해, 서해) 일대에서 수위의 차이가 있을 뿐 전면적·동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한반도 근해에서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전략은 현재 상시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 진행될 ‘상수(常數)’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 기반하에 우리해군은 중국의 한반도 근해 해양영역 확장을 저지시켜 우리의 해양 관할권을 지키는 것을 대응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해군은 중국 해양 회색지대 전략의 기반인 삼전(법률전·여론전·심리전)의 전개 효과를 ‘무력화’시켜 중국이 유도하는 점진적인 현상 변화를 멈추게 하고, 규범·규칙에 기반한 해양질서로 ‘환원’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이때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이 해양강국 달성이라는 국가대전략 차원에서 전개되는 만큼 우리해군의 대응전략이 국방부나 타 정부부처와 연계성 없는 단독적 활동으로 수행될 경우 그 효과성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우리해군의 대응전략은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유관부처를 지원하거나 또는 유관부처로부터 지원을 받음으로써 법률·심리·여론전 대응의 시너지(Synergy)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 기반 하 연구자가 제시하는 각 영역별 ‘구체화·체계화’된 대응책은 아래와 같다.

## 2.1. 법률전 대응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 전개에 따른 점진적 현상 변화를 멈추게 하고, 규범·규칙에 기반한 해양질서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법률전에 기반한 해양 회색지대 전략 전개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우리해군의 대응은 중국의 자의적·일방적 법 해석 및 주장과 다르게 역내 주변국 및 제3국에서도 우리의 대응을 충분히 납득하고, 나아가 우리를 지지할 수 있는 보편적이며 타당한 법적 명분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해군의 대응방향은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해군은 정부의 ‘중간선 원칙’과 ‘대륙붕 경계안<sup>64)</sup>’의 법적 ‘실효성’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해군은 서해 중간선 이동(以東) 측방해역에 대한 확고한 해양권의 수호 의지와 능력 현시(顯示)로 중국의 해군 작전구역으로 동경 124°선 고착화를 저지해 우리해군의 자유로운 활동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해군은 서해 중간선 이동(以東) 측방 해역에 대한 효과적인 경비작전 수행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때 평상 경비작전에서 중국해군 대비 우리해군 함정 척수 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경비작전 수행개념 발전에 반영되어야 한다.<sup>65)</sup>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해군 차원의 효과적인 전력운용 계획 수립과 함께 공군, 해경, 관공선과 협조해 서해 중간선 이동(以東) 측방해역에 대한 24시간 광

64) 우리정부는 2012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우리 동중국해 대륙붕 한계선이 일본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있다는 대륙붕한계정보를 제출하였다. - KTV국민방송(m.ktv.go.kr), “정부, 넓어진 대륙붕 경계안 UN 제출”(검색일: 2024. 2.25.).

65) 현재 한국해군은 중국해군과 동일한 능력과 크기(톤수)를 갖추고 대응할 수 있는 함정 척수가 부족한 실정이며 언론 및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 부각되고 있다. - 국회사무처(nas.na.go.kr), “2021, 2022, 2023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회의록(피감사기관: 해군본부)”(검색일: 2024. 2.25.).

대역 경비작전 개념을 수립·발전시켜 중국의 우리 관할해역 진입을 신속히 탐지 및 비례적이며 충분한 대응을 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해군이 우리 접속수역에 과도하게 접근한 것을 탐지 시 우리해군 함정 역시 이에 신속·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서해 중간선 이서(以西) 해역으로 기동해야 한다. 이때 함정 척수의 부족으로 중국과 동일한 규모의 해군 함정 동원이 제한될 경우 단독의 함정이라도 대응 기동을 수행함으로써 중국이 노리는 반복·누적의 효과를 상쇄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해군 함정 척수의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군의 수상·수중·항공전력 뿐만 아니라 무인전력과 민·군의 위성을 활용한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확장<sup>66)</sup>으로 서해 중간선 이동(以東) 측방해역에 대한 효과적인 24시간 광대역 경비작전 개념을 수립, 발전시켜야 한다. 이때 서해 일대 산재한 도서와 제주도를 무인전력의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면 광대역 경비작전의 핵심인 지속성과 신속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급속히 발전 중인 위성 감시 기술을 활용할 경우 우리 해군·해경 경비함정 및 관공선이 위치하지 못하는 해역에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중국 해경·해군함정의 우리 관할해역 진입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군은 해경 등 유관부처의 위성 감시시스템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sup>67)</sup>

둘째, 우리해군이 중국과 해양분쟁 간 맞닥뜨릴 다양하고 모호한 상황별 대응은 관계부처와 협조 및 노력의 통합에 관한 지침을 주는 국내법에 기반해야 한다.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은 해군 단독적 대응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해군함정이 한·중 잠정조치 수역 내 중국의 해상관측용 부표를 탐지했거나 중국 어선이 서해 NLL과 인접해서 군집을 이루어 조업 또는 항해하면서 해군함정의 경비작전을 휘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유관 부처의 해양안보 정책을 조정, 통제하고 노력을 통합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 부재하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해양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2007년에 「해양기본법」을 제정하여 일본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해양 정책을 통합·조정하고 있으며, 「해양기본법」에 따른 5년 주기로 해양질서 유지, 해상교통로 안전확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등의 해양안보를 다루는 해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sup>68)</sup> 따라서 우리해군은 국방부에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해양안보·정책을 수립

66) MDA는 “해양영역에서 안보, 안전, 경제, 해양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에 관한 인식”으로 정의되며 주로 해수면 아래, 해상, 우주까지 포함하는 해상상공, 해상과 인접한 육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감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67) 해경은 2026년부터 관측·통신·수색구조 위성을 차례대로 발사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망을 강화하고 감시용 무인기(드론)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 연합뉴스(www.yna.co.kr),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서해 해경함정 추가 배치”(검색일: 2024. 5.20.).

및 시행하기 위한 근거 법령 제정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야 하며, 일본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해양강국인 미국과 영국이 범정부 차원의 해양정책과 해양안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체계 및 노하우 등에 관해 미리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해군이 중국과 해양분쟁 간 직접적 충돌을 대비한 군사적 대응책은 법적 정당성·명분과 행동지침을 부여할 수 있는 교전규칙(ROE)에 기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군은 북한군을 상대로 정전시와 전시 교전규칙은 갖고 있으나, 주변국을 상대로는 국제법적 차원의 '자위권'을 제외하고는 상황별 분쟁에 적용할 수 있는 '교전규칙'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우리군과 달리 중국은 상황에 따른 해경의 무기사용을 허가하는 '해경법'을 2021년 발효하였으며, 정규군의 직접적 대응이 곤란한 해상민병대를 활용한 해양회색지대 전략을 전개 중에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해상분쟁을 겪고 있는 각국에서는 해상민병대를 활용한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sup>69)</sup> 우리해군 역시 주변국, 특히 중국과 해양분쟁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교전규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나, 이는 해군 단독으로는 할 수 없으며 국방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해군은 국방부에 위와 같은 교전규칙의 조속한 수립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야 하며, 이와 함께 해군 자체적인 교전규칙 수립을 위한 연구·검토와 함께 이미 교전규칙 검토·수립이 진행 중인 미국과 타 국가들로부터 정보수집 및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이때 해군 자체적인 교전규칙 수립 연구는 국내법 뿐만 아니라 국제법을 기반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해군이 유리한 군사적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을 다루고 있는데, 4항과 5항은 연안국이 항행의 안전과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500미터 이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안전수역 설치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을 적극 활용해 유사시를 대비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수호할 수 있는 안전수역 설치 및 이에 관한 세부적 운용·대응지침을 유관부처(해수부, 해경 등)와 함께 수립,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 2.2. 심리전 대응

우리해군이 중국의 관할권 행사를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물리적 활동을

68) 김강녕, "한국의 해양안보전략서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strategy 21』, 통권 45호. vol 22.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9.

69) 김희동, "'중국해상민병대'의 법적 지위와 각국 대응 검토," 『서강법률논총』, 제12권 2호, 서강대 법합연구소, 2023, pp. 69-73.

저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고강도의 물리적 역량 과시를 통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대결 회피를 반복·누적시켜 나가는 강압적 심리전에 기반한 해양 회색지대 전략 전개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우리해군은 중국의 물리적 역량 과시에 회피하지 않고 일관적이며 단호한 대응을 해야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해군의 대응방향은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해군은 중국의 저강도~고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물리적 역량 과시에 대한 대응작전 수행 간 법에 근거한 일관적이며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해군은 위 법률전 대응방향에서 제시한 국내법과 교전규칙(ROE)에 기반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유발할 다양한 저~고강도 분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세부적 대응 메뉴얼을 사전에 검토 및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해상 뿐만 아니라 서해 CHADIZ 확장과 같은 공중에서도 진행될 중국의 분쟁유발에 대한 대응 메뉴얼도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 해군함정 또는 중국 군용기가 우리 접속수역으로 접근 또는 KADIZ를 침범 시 대응에 나서는 해군함정의 탐지·무장 장비 운용수칙, 감시를 위한 기동수칙, 경고방송 절차, 해경함정 및 공군기 등의 합동전력과의 협조·지원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전력들은 육상훈련장에서 전술훈련(Command Post Exercise, CPX)과 해상에서 실기동훈련(Field Training Exercise)을 통해 대응 메뉴얼을 숙달해야한다. 이를 통해 현장 대응전력은 중국이 분쟁유발 시 주저함 없이 일관적이며 단호한 대응을 함으로써 관할해역 수호를 위한 우리해군의 능력과 의지를 중국에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둘째. 우리해군은 중국의 저강도~고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물리적 역량 과시와 이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대응 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은 군사전략 및 교리의 선제성을 지속 강화시켜왔으며,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선제성 강화 흐름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sup>70)</sup> 중국의 선제성을 강조하는 군사전략 및 교리에 미·중 패권경쟁이 고조될수록 해양팽창을 서둘러 완료해야 한다는 조급증이 결합될 경우 우리의 단호한 대응에 중국해군 함정은 과민하게 반응하며 우발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해양의 개방적 특성과 한·중 해군함정이 보유한 첨단장비들의 장점인 즉각적인 무장 발사준비 태세와 신속한 통신능력은 우발적 무력충돌의 영향을 급속히 전파, 확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해군은 중국해군과 위기관리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직통망 상시 운용과 더불어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70) 김남수, "중국해군의 공세적 서해진출 전략 분석과 한국해군의 대응전략 발전방향," 『해양안보』, 6권 1호, 2023, pp. 16-17.

셋째. 우리해군은 규범·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잠재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한·미 해군의 공동 대응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정부는 2022년 12월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 공식적 발표와 더불어 한·미 동맹을 앞으로『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국방정책<sup>71)</sup>을 추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부의 안보정책과 연계해서 우리해군은 국방부와 연계해 동맹 차원에서 한·미 해군 간 규범·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해양안보 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유롭고 열린 항행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정례적인 한·미 해군 연합훈련 시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국가가 해경과 민간어선을 동원한 모호한 해상 군사도발 감행” 상황을 상정한 상황조치훈련(CPX) 또는 실기동훈련(FTX)을 실시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 중국을 인태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데 주요 협력국가라고 명시한 만큼<sup>72)</sup> 한국해군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중국을 직접 겨냥한 공동의 대응개념 수립은 제한되지만 한·미 해군이 ‘잠재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개념을 발전시킨다는 상징적 ‘SC’와 함께 위의 예시처럼 한·미 해군의 자유롭고 열린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상황조치 또는 실기동훈련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고강도 물리적 역량을 과시 의도를 억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사시 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심이 있을 경우 평상시 한·미 해군이 공동으로 수립, 발전시킨 대응개념과 해상훈련을 통해 숙달된 대응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2.3. 여론전 대응

우리해군이 중국의 서해 및 이어도 일대 해역이 자신의 내해로 자국민 및 제3국가에 각인시켜 나가는 것을 저지하며,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에 우리가 단호한 대응을 지속할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중국의 여론전에 기반한 해양 회색지대 전략 전개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우리해군은 국민의 경각심 및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우리의 단호한 대응에 대한 제3국의 지지를 획득해 나가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해군의 대응방향은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해군은 ‘인지전(認地戰)’ 차원에서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의 부당성을 알리고 우리 대응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공보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전쟁에서 공보 활동의 중요성은 걸프전을 계기로 크게 부각되었으며, 최근에는

71) 국방부, 『2022년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3), p. 308.

72) 대한민국정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서울: 청와대, 2023), pp. 9-10, 1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인지전 수행의 주요 방법으로 공보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군의 경우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소규모로 편성된 ‘대변인 부대(Spokesperson’s unit)’를 전투 현장에 출동시키고 있다. 이 부대는 전투현장을 누비며 국제적 영향력이 큰 언론매체와 수시로 인터뷰를 하면서 자국의 전쟁수행 방식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반대로 하마스의 전쟁범죄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우리해군도 이스라엘군의 ‘대변인 부대’ 운영시스템을 우리해군의 부대운영 방식 및 작전적 특수성을 고려 발전적 적용·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중국의 해상분쟁 유발 시 부대 차원에서는 함대사령부에 편성된 정훈공보팀이 긴급 출항하는 해군함정에 신속히 편승하며, 단일 함정 차원에서는 분쟁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진과 영상을 촬영·녹화하는 함 채증팀을 편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해군은 중국이 해양 회색지대 전략으로 진행하는 고강도 도발 뿐만 아니라 모호한 도발에 대해서도 분쟁현장에서 채증한 영상 및 사진을 바탕으로 우리군 대응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중국의 부당성을 국내·외 언론매체에 신속히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우리해군은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에 맞서는 단호한 대응에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해양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양안보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종 공청회 개최, SNS를 활용한 영상자료 제작·공유 등을 통해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및 애국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각종 SNS를 이용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비판과 우리대응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각종 자료를 게시할 경우 SNS의 빠른 재생산과 공유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외에 빠른 전파를 통해 국민적 지지와 우호적 국제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

셋째, 우리해군은 중국과 해양분쟁을 겪는 국가들과 군사외교를 강화하며, 중국해군에게 우리의 단호하고 일관된 해양분쟁 대응원칙과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해군은 외교부와 관련 내용 소통 강화 및 필요성 제기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아시아 안보회의(Asia Security Summit, ASS),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 ADMM plus) 등과 같은 안보협의체에 적극 참가하여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서해에서 규범·규칙에 기반한 해양질서 확립과 준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회의 의제를 주도적 제시하며, 역내 국가 공동의 합의문 체결 등의 군사외교를 적극 펼쳐 나가야 한다. 위와 같은 안보협의체 또는 중국해군과 양자회담에서 우리해군은 중국에게 서해 및 이어도 일대 해역에서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에 의한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련의 행위에 단호히 반대하며 엄중한 문제제기를 해야한다. 이를 통해 역내국가들과 중국의 해양영역 확장이라는 공동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우호적·협력관계를 조성할 수 있으며, 서해 및 이어도

일대가 중국의 내해라는 인식이 역내국가 및 국제사회에 전파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현재까지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에 관한 국내 연구들이 기존의 중국 회색지대 전략 연구의 분석 결과를 답습하고 있으며, 대응책에 관해서도 원론적 입장과 방향만이 제시된 ‘선언적·개념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자국 고유의 전략문화를 구성하는 ‘삼전(三戰)을 기반으로 해양 회색지대전략을 전개한다는 인식 하에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근해에서 진행한 해양 회색지대 전략을 삼전의 영역(법률전·심리전·여론전)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해역별 해양 회색지대 전략 전개 양상 중 일부에서는 유사한 수위를 떠나, 다수의 전개 양상에서는 분명한 수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법률전·심리전·여론적 영역에서 전개양상의 수위와 현상변경에 따른 기정사실화의 정도 모두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 근해 순으로 높았다.

이때 필자는 중국은 점차적으로 한반도 근해에서도 동중국해 수준의 회색지대 전략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중국은 국가 차원의 대전략인 해양강국 달성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서해와 이어도 일대를 자국의 ‘내해’로 만들어 이곳의 경제적·군사적 가치를 차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추후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서해 및 이어도 일대 해역을 포함하고자 할 경우 중국의 서해 및 이어도 일대 해역을 차지하기 위한 해양 회색지대 전략은 보다 공세적인 양상을 띠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식 하 추후 중국이 한반도 근해에서 전개할 해양 회색지대 전략 전개 양상을 아래와 같이 전망하였다.

먼저 “법률전” 영역에서 첫째, 지속적으로 ‘형평의 원칙’을 일방적 주장하며, 점차적으로 ‘관할권 행사’를 시도할 것이다. 둘째, 동중국해에서의 대륙붕 경계안을 토대로 한·일 간 공동개발구역(JDZ) 협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우리나라와 해양경계획정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서해와 이어도 일대에 관측용 부표와 해상구조물을 추가적 설치할 것이다.

다음 “심리전” 영역에서 첫째, 해군 작전구역 동경 124°선 고착화의 지속 추진과 함께 해군 작전구역이 자신이 일방적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더욱 확장을 시도할 것이다. 둘째, 일방적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우리해군



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시키기 위해 고강도의 물리적 역량을 적극 과시할 것이다. 셋째, 이어도 일대에서 이른바 ‘벌떼 전술’을 사용해 우리를 압박할 것이다.

마지막 “여론전” 영역에서 첫째, 다양한 언론매체를 이용해 관할권 주장 근거인 ‘형평의 원칙’을 지속 선전할 것이며, 이어도와 파랑초를 국제적 분쟁수역화를 시도할 것이다. 둘째, 2028년 한·일간 공동개발구역(JDZ) 협약 만료를 대비해 7광구 개발에 개입하기 위한 여론전을 적극 실시할 것이다. 셋째, 서해와 이어도 일대 해역에서 관영매체 및 다양한 언론매체를 이용 자신의 활동을 지속 선전 및 의도적 노출시킬 것이다.

필자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해군 전략개념으로『중국 해양 회색지대 전략의 기반인 ‘삼전’의 전개 효과를 ‘무력화’시켜 중국이 유도하는 점진적인 현상 변화를 멈추게 하고, 규범·규칙에 기반한 해양질서로 ‘환원’을 지속적으로 추구』를 제시하였다. 이때 우리해군의 대응전략은 유관 정부 부처와 상호 지원·협조를 기반으로 시너지 효과(Synergy) 발휘를 기반으로 해야하며, 이러한 전략개념을 이행할 ‘구체화·체계화’된 대응책별 목표는 아래와 같다.

먼저 “법률전” 대응으로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 전개에 따른 점진적 현상 변화를 멈추게 하고, 규범·규칙에 기반한 해양질서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법률전에 기반한 해양 회색지대 전략 전개 효과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다음 “심리전” 대응으로 우리해군이 중국의 관할권 행사를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물리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고강도의 물리적 역량 과시를 통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대결 회피를 반복·누적시켜 나가는 강압적 심리전에 기반한 해양 회색지대 전략 전개 효과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마지막 “여론전” 대응으로 우리해군이 중국의 서해 및 이어도 일대 해역이 자신의 내해로 자국민 및 제3국가에 각인시켜 나가는 것을 저지하며,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에 우리가 단호한 대응을 지속할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중국의 여론전에 기반한 해양 회색지대 전략 전개 효과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중국이 해양영역 확장을 위해 구사하는 해양 회색지대 전략은 국가 대전략인 해양강국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접하고 있는 모든 해역(남중국해, 동중국해, 서해) 일대에서 수위의 차이가 있을 뿐 전면적·동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한반도 근해에서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은 현재 상시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 진행될 ‘상수(常數)’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구상이 유사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개념적,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된다. 지금 당장 우리의 현재 능력을 토대로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의한

현상변경의 진행을 저지시킬 대응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이때 단순 해군만의 대응이 아닌 앞서 수차례 밝힌 것처럼 유관 정부 부처가 상호 지원·협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Synergy) 발휘가 가능한 대응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중국이 유도하는 현상변화에 적극적 대처하지 않고 관망에 가까운 대처를 지속하면 중국은 현상변경에 자신감을 얻고 중국에는 특정 군사·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이어도 일대에서 자국 해양법의 확대 적용을 통해 우리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차단 및 통제해서 해상교통로 봉쇄를 시도하거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강제적 점령하기 위한 양배추 전술 구사와 같은 회색지대에서 전쟁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의 가장 끝단에 속하는 고강도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안보 위협이 해상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를 계기로 정부 및 학계에서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분석법을 제시하고, 지금 당장 적용 및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현실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고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저서

- 국방부, 『2022년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3.
- 대한민국정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서울: 청와대, 2022.
- 이서항 등 9명,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경기: 도서출판 인간사랑, 2020.
- 이재영·황태연·반길주·지은주,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번영』, 서울: 통일연구원, 2022.
- Bonny Lin, et al, *Competition in the Gray Zone: Countering China's Coercion Against U.S. Allies and Partners in the Indo-Pacific*,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22.
- Lyle J. Morris, et al, *Gaining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ray Zone: Response Operations for Coercive Aggression Below the Threshold of Major War*,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19.
- Mercedes Trent, *Over the Line: The Implications of China's ADIZ Intrusions in Northeast Asia*, Washington, D.C: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2020.
- Michael Green, et al, *Countering Coercion in Maritime Asia: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ay Zone Deterrence*, Washington, D.C: CSIS, 2017.
- U.S. Navy, *The PLA Navy: New Capabilities and Missions for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2015.
- You Ji. *The Armed Force of China*, New York: I.B. Tauri, 1999.
- 胡波, 이진성·이희역 역. 『머헨 시대 이후 중국의 해양력』, 서울: 박영사, 2021.

### 2. 논문

- 강승규·황상현·최구식, “중국해군의 서해 군사활동 증가 시사점 및 대응방안,” 『한국군사학 논총』, 제7집 2권. 대전: 미래군사학회. 2018.
- 고봉준. “독도, 이어도 해양영토분쟁과 한국의 복합 대응,” 『한국정치연구』, 22권 1호. 서울: 한국정치연구소. 2013.
- 김강녕, “한국의 해양안보전략서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strategy 21』, 통권 45호. vol 22.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9.
- 김남수, “중국해군의 공세적 서해진출 전략 분석과 한국해군의 대응전략 발전방향,” 『해양안보』, 6권 1호, 2023.
- 김재엽, “전쟁 이외의 전략도전으로서 중국의 삼전: 특징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의 시사점,” 『신아세아』, 29권 1호, 2022.

- 김주형,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관할권 강화정책과 실행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33권 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 김회동, “‘중국해상민병대’의 법적 지위와 각국 대응 검토,” 『서강법률논총』, 제12권 2호, 서강대 법합연구소, 2023.
- 박재찬,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와 해양 무기체계 무인화가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중국과 중국학』, 제45호,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22.
- 배학영, “중국 해양세력의 서해상 활동증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국방연구』, 63권 3호. 논산: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
- 이동률,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57(2), 한국국제정치학회, 2017.
- 이민규,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 시기별 외연 확대 특징과 구체적인 이슈,” 『중소연구』, 아태지역연구센터, 통권 153호, 2017.
- 장혜진, 조비연, 이상국, “중국 해경법의 주요 내용 및 안보적 함의,” 『국방논단』, 제1849호, 한국국방연구원, 2021.
- 정갑용, “남중국해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 논총』, 34권 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Sangkuk Lee, “China’s ‘Three Warfares’: Origins, Applications, and Organization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7, No. 2, 2014.

### 3. 기타자료

- 경기일보(kyeonggi.com), “한강 하구까지 올라온 중 어선 무력단속 쉽지않고..대책 답답,” (검색일:2024. 2.18.).
- 구자선, “남중국해 관련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이후 중국의 대응,” 『IFANS FOCUS』, 2016-36,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6.
- 국회사무처(nas.na.go.kr), “2018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부록.서면질의 답변서(피감사기관: 해군본부)”, 대한민국 국회, 2018, p. 61, 220, 221.
- \_\_\_\_\_, “2021, 2022, 2023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회의록(피감사기관: 해군본부)”(검색일: 2024. 2.25.).
- 김덕기, “중국의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군사활동 동향 및 전망,” 정책보고서 시리즈, 2022-01,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2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세안,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으로 남중국해 긴장 고조,” 『월갈특집이슈』, 2023-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 문화일보(m.munhwa.com), “중 서해 내해화 의도 노골화...중 해상전력에 의해 서해바다 병들고 있다.”(검색일: 2023. 1. 9.).
- 아시아경제(asiae.co.kr), “중국 핵잠수함 이번엔 서해 앞바다 출현”(검색일: 2023. 1.28.).
- 아주경제(ajunews.com), “[강효백 칼럼] 제2의 이어도 파랑초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자”(검색일: 2024. 2.24.).

- 유재광, “중국 회색지대 강압 전술의 진화,” 『전문가 오피니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 유현정, “중국 ‘해경법’ 주용내용 분석 및 시사점,” 『이슈브리프』, 통권 245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 연합뉴스(yna.co.kr), “중, 시진핑 1mm도 양보말라 지시에 센카쿠 일 어선 검사추진”(검색일: 2024. 2.15.).
- \_\_\_\_\_, “중, 일반적 동중국해 방곡식별권에 군함 상시 배치”(검색일:2024. 2.17.).
- \_\_\_\_\_, “중, 서해 중간수역에서 훈련 올해만 10회 육박”(검색일: 2024. 2.18.).
- \_\_\_\_\_,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서해 해경함정 추가 배치”(검색일: 2024. 5.20.).
- \_\_\_\_\_, “필리핀, 남중국해서 연구활동..중과 영유권 분쟁 새 불씨되나,”(검색일: 2024. 5.20.).
- 월간군사저널(no2.nayana.kr), “중국 삼전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검색일: 2024. 2.10.).
- 이재현, “남중국해에서 공세적 중국의 실패: 세밀한 계획 부재와 잘못된 상황 판단,” 『Issue Brief』, 2016-12호, 아산정책연구원, 2016.
- 표나리,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과 3전의 전개: 한국에 대한 함의,” 『정책연구시리즈』, 2022-10, 국립외교원 안보연구소, 2022.
- 제주일보(www.jejunews.com), “이어도 옆 암초 파랑초”(검색일: 2024. 2.24.).
- 조선일보(www.chosun.com), “시진핑, 남중국해 담당 부대 방문해 “실전훈련 강화하라””(검색일: 2024. 2.13.).
- \_\_\_\_\_, “중·러와의 군사밀착...동중국해서 또 합동군사훈련한다”(검색일:2024. 2.18.).
- \_\_\_\_\_, “한·미 잠수함 탐지, 중국, 한국쪽 서해에 대형 부표 9개 띄워”(검색일: 2024. 2.18.).
- \_\_\_\_\_, “[단독] 중 서해 124도에 멋대로 경계선...올 100여차례 군사훈련, 영해화 노려”(검색일: 2024. 2.19.).
- \_\_\_\_\_, “[단독] 중 서해 124도에 멋대로 경계선...올 100여차례 군사훈련, 영해화 노력(검색일: 2024. 2.24.).
- 주한중국대사관(kr.china-embassy.gov.cn),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에 관한 성명”(검색일: 2024. 2.11.).
- 중앙일보(joongang.co.kr), “이 와중에 또 남중국해 분쟁...코로나도 두손 든 중 70년 야심”(검색일: 2024. 2.12.).
- \_\_\_\_\_, “[최윤희의 퍼스펙티브] 중국 ‘동경 124°E 서해 넘어와 작전하지 말라’(검색일: 2024. 1. 5.).
- \_\_\_\_\_, “[단독] 백령도 40km 앞까지 왔다, 中 군함 대놓고 서해 위협”(검색일: 2024. 2.19.).
- \_\_\_\_\_, “EEZ도 확정 못한 한-중, 영키고 영킨 경계선은 시한폭탄”(검색일: 2023. 2. 6.).
- \_\_\_\_\_, “[단독] 中 또 다시 서해 무단진입...이번엔 ‘스파이 군함’ 보냈다”(검색일: 2023. 1.10.).
- 한겨레(m.hani.co.kr), “중국 ‘영토분쟁 센카쿠 해역’에 군함 첫 진입”(검색일: 2024.

2.10.).

\_\_\_\_\_, “중국, 센카쿠 주변 해역서 군사훈련”(검색일: 2024. 2.17.).

KTV국민방송(m,ktv.go.kr), “정부, 넓어진 대륙붕 경계안 UN 제출”(검색일: 2024. 2.25.).

SBS뉴스(news.sbs.co.kr), “잠정조치수역에 등장한 중국 구조물...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  
인가?(검색일: 2024. 2.18.).

Defense Priorities(defensepriorities.org), “Assessing Chinese maritime power”  
(검색일: 2024. 1.15.).

Georgetown Security Studies Review(georgetownsecuritystudiesreview.org)  
“China’s “Three Warfares” In Theory and Practice in the South China Sea  
(검색일: 2024. 2.10.).

INSIDEVINA. “베트남 ‘중국의 남중국해 일방적 어업금지조치 비난...주권침해,”(검색일:  
2024. 2.28.).

Internatioanl Security Advisory Board, U.S Deparment of State, Report on Gray  
Zone Conflict, January 3, 2017.

JCG, “The Number of chinese Government and Other Vessels That Entered Japan’s  
Contiguous Zone or Intruded into Territorial Sea Surrounding the  
Senkaku Islands,” chart, March 31, 2022.

South China Morning Post(SCMP.com) “Surveillance under the sea: how China is  
listening in near Guam,”(검색일: 2024. 2.18.).

THE EPOCH TIMES(kr.theepochtimes.com), “중 잇달아 센카쿠 침범...대만 침공 위한  
미군 분산작전”(검색일: 2024. 2.15.).

Abstract

**A Study on China's Sea Gray Zone Strategy and Korean Navy's Countermeasures: Focusing on the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the maritime-based Three Wars**

**Kim, Nam-su**

(ROKN lieutenant commander)

This study started with the awareness that domestic studies on China's maritime gray zone strategy have been following the analysis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nd that only principled positions and directions for countermeasures remain at the 'declarative and conceptual' level. In order to overcome the above problems, the author analyzed the maritime gray zone strategy being developed in the South China Sea, East China Sea, and the West Sea and Ieodo areas, recognizing that China is developing a maritime gray area strategy based on the 'three warfare' that constitutes its own strategic cultu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predicted that China's maritime gray zone strategy will be more aggressive in order to occupy the West Sea and Ieodo in the future. As a concept of our naval response strategy, The author proposed to 'neutralize' the development effect of 'three warfare', the basis of China's maritime gray zone strategy, to stop the gradual change in the phenomenon induced by China, and to continuously pursue 'return' to a maritime order based on norms and rules. In this study, a 'concrete and systemized' countermeasure to implement this was presented.

**Key Words:** gray zone strategy, three warfare, strategic culture, maritime power, fait accompli, salami-slicing tactics